

윤리적 기사의 조건: 개별 행위보다 중요한 한국언론 구조의 문제들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사다.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정보를 전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가 문제가 되는 이유도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저널리즘 윤리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강조돼 왔다. 혼자 읽는 개인의 일기라면 사회가 그 내용이나 표현법에 대해 간섭할 이유가 없다. 동호회에서 생산하는 회의록도 내부인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나 기록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기자가 쓰는 기사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읽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작성된다. 발행부수가 적거나 시청자가 몇 안돼도 이 전제는 유효하다. 종이매체든 디지털 매체든 예외 없이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뉴스를 전달한다. 바로 이 점이 언론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윤리적 요구를 정당화하는 근거다.

지난 1년 한국 기사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윤리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이 발간물에 써왔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다. 한국 기사는 왜 해외 선진매체들이 생산하는 기사들에 비해 더 많은 윤리 문제를 담고 있는가? 한국 기자들이 외국 우수매체 기자들에 비해 윤리의식이 크게 뒤지는가? 한국 기자들의 자질이 해외 기자들과 비교할 때 지적 기반에서 많이 뒤떨어져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가? 딱히 기자 개인적 자질의 차이가 아니라면 무언가 다른 원인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 현실 언론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좋은 길잡이가 돼주었다.

기자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하는 사람은 드물다. 법률가나 의사 등 모든 전문직은 때로 윤리적 실수를 하지만, 오직 언론인만이 불행하게도, 또는 용기가 많아서, 그러한 실수를 공중들에게 드러내야 한다. 그러한 윤리적 실수가 노출될 경우, 공중의 반응은 매우 신속하고, 또 혹독하다.”

필립 패터슨(Phillip Patterson)과 리 윌킨스(Lee Wilkins) 교수가 쓴 <미디어 윤리: 쟁점과 사례들>(1991)이란 책 첫 장에 나오는 단락이다. 기자 직업이 어떻게 다른 전문직들에 비해 윤리 문제를 더욱 날카롭게 인식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근원적 조건은 국가나 사회 문화적 맥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대부분 자유 언론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는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패터슨과 윌킨스 교수가 지적하듯이, 기사는 취재하는 과정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기사를 출고하는 순간, 만들어진 상품은 곧바로 공중의 심판대에 오른다. 기레기라는 오명은 이러한 직업적 특수성이 만들어진 한국언론의 부정적인 자화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모두 기자 개개인의 부족함이나 잘못된 윤리적 판단의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이해되는 것이 맞을까? 개별 기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취재와 글쓰기 과정을 고쳐나가면 윤리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

최근 언론계 상황들이 보여주는 구조의 문제들

안타깝지만 한국 언론계에는 기자로 하여금 윤리적이기 어렵게 하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 요인들은 한국 언론의 생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형으로 고정된 언론사 비즈니스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을 잡은 통치 세력이 언론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러한 권력을 대하는 언론의 대응 방식이다.

경영구조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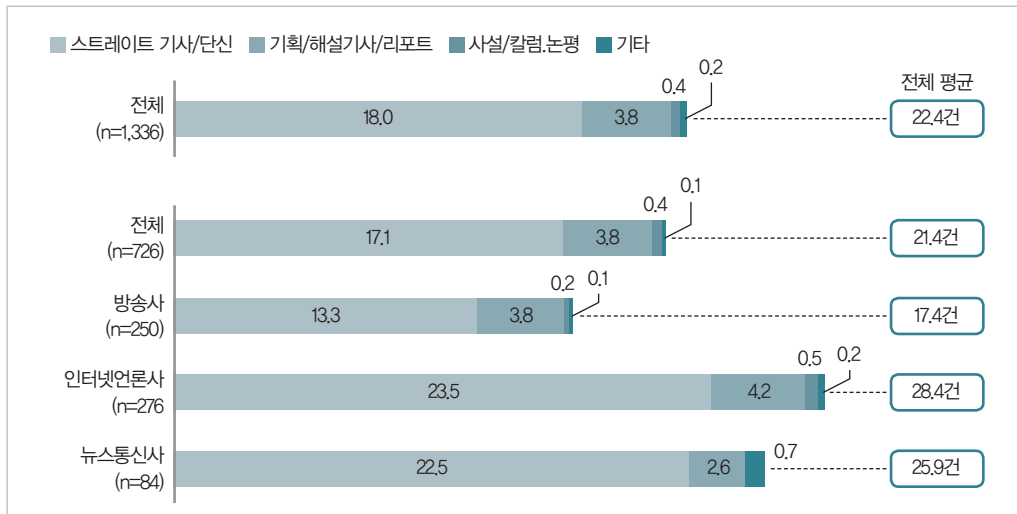
지난 몇 주, MBN이 설립 자본금을 조성하는 과정이 언론계 주요 뉴스로 등장했다. 수사결과 일부 자금이 문제 있는 방식으로 조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물러났고,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간부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됐다. 초기 자본금 3,000억 원 가운데 500억 원 정도가 문제였다. 이 뉴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현실이 대다수 한국 언론사의 경영구조와 규모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도 한 건설회사가 지분을 매입하는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혼란에 빠져있다.

좋은 기사를 생산하려면, 경영의 안정은 필수적 조건이다. 재정적 안정뿐 아니라 언론사의 특성에 걸맞은 경영철학도 견고하게 준비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경영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회사를 찾기가 어렵다. MBN이나 서울신문은 이 시점에서 어느 회사에서나 발생할 수도 있는 경영상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을 뿐이다.

경영의 불안정과 저널리즘 철학의 부재는 자연히 뉴스 생산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30여 년 현장관찰과 해외 우수 매체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도달한 결론은 한국 매체의 뉴스 생산방식은 최소한의 기자인력으로 그날그날의 뉴스 수요를 맞춰나가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뉴스룸 운영 모델은, 아래 <표1>을 보면, 기자들의 혹독한 근무여건으로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언론인 의식조사-일주일 평균기사 작성건수

(단위: 건)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 의식조사(2017)

* n=최근 일주일간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 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8년 발간한 <언론인 의식조사> 보고서에서 가져왔다. 2017년 전국 언론매체에서 일하는 기자 1,527명을 조사한 결과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 기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22건의 기사를 생산한다. 5일 근무로 환산하면, 하루 4.5개의 기사, 6일 근무로 하면, 하루 3.7개의 기사를 생산하는 셈이다. 신문이 5일 근무 시 하루 4건 정도로 상대적으로 생산 건수가 적는데 비해 통신사와 인터넷 매체들은 하루 다섯 건 이상의 기사를 출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노동 강도는 당연히 부족한 취재인력 구조가 원인이다. 한국 신문 가운데 편집국 인력이 300명을 넘는 회사는 거의 없다. 중앙 일간지 가운데도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취재인력이 100명이 안 되는 회사가 몇몇이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1,600명이 근무하는 편집국을 운영하고, 일본 대



표 신문인 아사히나 요미우리 등이 2,000명이 넘는 취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구조와는 대비된다.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한 건 내외의 기사를 출고한다. 백악관처럼 기사가 많은 출입처 기자는 예외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건의 기사를 써낸다.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면, 한국 기자들은 하루에 뉴욕타임스 기자가 일주일에 생산하는 기사보다도 많은 양의 기사를 써내는 셈이다. 윤리적 검토는 고사하고, 기사에 필요한 기본 정보의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업무 강도라 할 수밖에 없다.

권력의 구조적 통제 문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지나며, KBS는 많은 내·외부 갈등을 겪었다. 라디오 편집팀이 지역부서로 이동 발령을 받았고, 법조 출입 기자들도 심각한 갈등 끝에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모두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기사의 취재와 방송내용에 관한 기자들의 결정에 대한 외압이 만들어낸 상황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방송은 의식 있는 기자들 다수를 교육을 핑계로 보도부서 밖으로 퇴출시켰던 일이 있다. 그리고 임원과 주요 출입처 기자들은 친정권적 인사로 대폭 교체했다. 그 후 MBC 보도국은 철저하게 집권세력과 호흡을 맞춰가며 세월호 사고 보도를 비롯한 많은 사안들을 집권세력 구미에 맞게 왜곡 보도했다.




KBS에서 지난 10월 일어난 일들은 과거 정권의 행태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근본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태생부터 군사정부의 기획이었던 한국의 공영방송은 거의 40년을 공영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집권세력이 임명하는 경영진이 특히 보도의 방향을 권력의 이해관계에 맞춰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와 에디터들은 권력 측에서 보내오는 신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요 사안을 잘못 판단하면, 언제라도 인사 조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언론통제는 특히 박정희 시대 이후 지속돼온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자유언론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적 가치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예측적인 권력과의 관계는 윤리적 저널리즘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조건일 수밖에 없다.

윤리적이기 어려운 구조문제에 대한 성찰 시급

한국적 언론 경영 행태와 정치문화는 현장 기자 수준에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애요소다. 물론 기사는 취재와 기사쓰기 과정에서 항상 윤리적 고려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 독자는 기자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 기사를 생산했고, 그렇게 전달되는 내용은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기사를 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한국 언론의 구조적 현실은 윤리적 취재와 양심에 따른 보도를 격려하는 조건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한 구조적 조건에 눈을 감은 채 저널리즘 윤리를 강조하는 일은 그 자체가 도덕적 모순일 수 있다. 한국 기자들의 비윤리성을 감시하는 일 못지않게 언론계를 관통해 온 윤리의 구조적 모순을 사회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학문적, 제도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Patterson, Phillip and Wilkins, Lee(1991). Media Ethics: Issues and Cases, second edition. Madison, Wisconsin:Brown and Benchmark.